

# 민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이달 본회의 처리

이재명 “1500만 주식투자자 고려” 차기 대권 염두... 외연 확장 포석 국힘 “늦었지만 다행... 즉시 협상” 다른 야당 “세금 깎아주기 동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폐지’에 동참해줄 것을 압박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폐지 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

으로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미비,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 유예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시장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 보완 후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금투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까지 진보 진영에서 예민한 ‘세금 완화’에 열린 입장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차기 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유연성을 꾀했다는 평가다.

금투세 폐지 찬성 배경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란 현실적 이유와 대권 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나”며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키느냐”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진보당도 논평을 내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박미정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후 고독사 줄어”

박미정(사진)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고독사 예방에 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7대 영역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1만1454건이 지원됐다. 광주지역 고독사 수도 △2020년 118건 △2021년 111건 △2022년 117건 △2023년 9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 의원은 “광주 고독사 발생이 지난해 대비 20% 줄었다. 이는 지난해 통합돌봄 시행이 고독사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고독사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일 수록 사회와 단절을 경험하고 사회관계망 약화로 고독한 삶을 산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기존 돌봄에서 소외된

△2021년 111건 △2022년 117건 △2023년 9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에 5개 자치구 특화사업까지 반영됐다”며 “사람이 사람을 지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정다는 “광주시, 마약범죄 대책 마련 시급”

정다는(사진)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마약범죄가 10년 새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광주시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계를 볼 때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고 방만하다. 촘촘하게 관리·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마약사범은 99% 증가했다. 이를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3411개소의 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

## 홍기월 “광주 작은학교 자율학구제 확대해야”

홍기월(사진) 광주시의원은 4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작은학교의 학생 유입을 위해서는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자율학구제 지정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은학교는 광주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소규모학교와 도심소규모학교를 말한다. 광주지역 농촌소규모학교는 광주동초·삼도초·분량초·송학초 등 11개 초등학교와 임곡중·평동중·대촌중 3개 중학교가 있다. 정성현 기자

홍 의원은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가 증가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지역 환경에 부합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년 만에 대통령 없는 시정연설... 한 총리 대독

###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4대 개혁 절체절명 과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

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시정연설은 정부

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초와 주요 정책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다. 불가피한 사유없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이 하늘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대통령실 특활비 등 전액 삭감하겠다”

### “이외 부처도 절반 감액”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외 부처도 절반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담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에서 이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외 부처도 50%(퍼센트)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법으로 폐지하려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겠다”며 “위법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감액하는 한편, 유전개발사업 ‘대왕고래’ 출자사업 500억원, 부실 설계된 ‘마음건강사업’도 적극 재검토해서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종식사업 예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사각지대가 너무 커 유기견이 대폭 늘거나 한동안 대규모 불법 도축이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무상교육, 재난안전, 재생에너지, 저출생극복, 인공지능(AI) 등 민주당이 정한 ‘6대 민생미래예산’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내년

도 예산에 반영하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지원이 중단된 초·중·고 문화예술강사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재난안전 예산,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 확충 투자 예산, 아동수당·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저출생극복 예산,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역사왜곡 대응,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군장병 장교 지원과 관련한 사업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라며 “시한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